

Mc.a.5

자기 대통령이 이행해야 할

여성정책 8개 분야 30대 과제

1997. 10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차기 대통령이 이행해야 할

여성정책 8개 분야 30대 과제

1997. 10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 선정 이유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여성들이 일터와 가정, 사회에서 여성이기때문에 받는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극복하고자 대안적인 여성정책을 마련하여 정부가 여성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수립된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대통령선거는 그동안 여연에서 주장해 온 여성정책 방향에 대해 각 정당이 채택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여연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꼭 채택하고 이행해야 할 여성정책과제를 8개 분야 30대 과제로 선정하였다. 여연은 대선에서 30대 여성정책과제를 잘 반영하도록 각 후보에게 제안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여성정책 과제의 기본 방향

여연은 여성정책 30대 과제를 마련하면서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한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강령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기본정신과 주요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96년 7월부터 발효된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여성정책의 주요분야, 95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0대과제>에서 이행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북경여성회의의 행동강령은 지난 20년간 여성에 의해 얻어진 성과와 주요 관심분야의 요지를 함축한 것으로, 21세기의 세기적인 사회변화를 인식하면서 보편적인 인권정신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지구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로서 남녀평등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실로 여성정책의 세계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행동강령은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여성문제가 특정영역에서 따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모든 정책결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증진과 모든 정책결정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동강령은 여성과 빈곤문제를 포함한 12개 주요 관심분야에 관한 전략목표와 행동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 분야는 아래와 같다.

<북경여성대회 12개 주요 관심분야>

1. 빈곤

- 여성빈곤극복을 위한 사회정책의 검토
- 경제정책의 검토
- 금융제도 및 기관에 대한 접근 배려
- 여성빈곤에 관한 성 인지적 연구의 수행

2. 교육훈련

- 교육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 고려
- 차별적 교육, 훈련의 철폐 및 평등한 교육, 훈련 개발
- 교육기회의 확대

3. 보건

-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서비스의 증진
- 예방프로그램 강화
- 보건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고려
- 여성보건에 대한 조사연구의 촉진 및 정보보유

4. 폭력

- 종합대책
- 비폭력의식교육

5. 평화,통일

- 평화문화 조성을 위한 기여증진
- 평화, 통일관련 회의 및 기구에 대한 여성참여 증진

6. 경제

- 고용차별 철폐
- 경제적 역량강화
- 직장과 가정의 조화지원조치
- 성 인지적 경제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 정치참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 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
- 여성의 참여증진을 위한 교육, 훈련조치
- 국제기구 및 외교업무의 여성참여 확대

8. 국가기구등의 제도적 장치

- 기존기구의 기능강화
- 성차별개선위원회 등 새로운 기구의 설치
- 모든 국가정책에서의 여성문제의 주류화
- 성차별분리자료와 통계의 작성과 활용
- 유엔시스템과의 협조체계구축

9. 인권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등의 이행
- 법상의 차별철폐
- 사실상의 평등실현
- 법률구조제도
- 법률문해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 특수상황의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10. 미디어

- 참여의 증진
- 여성에 대한 균형된 이미지 증진
- 성 인지적 관점 통합을 위한 현행 미디어 정책의 검토 및 개선

11. 환경

- 여성환경능력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할지원
-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성 인지적 관점통합

12. 여아, 가족

- 여아의 권리증진
- 사회참여에 대한 여아의 인식증진
- 근로소녀의 보호
- 폭력의 근절
- 평등한 가족문화 형성

■ 여성정책 8개 분야 30대 과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담당기구로써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1. 여성정책 전담부서로서의 여성부를 신설해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금의 적립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②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3. 정당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4. 고위임명직 공무원의 여성임명을 확대해야 한다.
5. 2000년까지 정부 각종위원회에 30% 여성할당을 제도화해야 한다.

③ 여성의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기반을 조성한다.

6. 채용·배치·승진·직업훈련에서 일정비율 이상 여성할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남녀노동자의 직장생활과 가사생활의 양립지원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8. 교묘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고용평등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9. 여성고용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1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및 일하는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11. 여성농민을 농업생산인력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12.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상품화를 근절해야 한다.

13.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4. 성상품화 및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환경을 정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15. 여성장애인과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5]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가족복지 서비스의 사회화, 여성의 가사노동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한다.

16.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부계 혈통 중심의 가족법 및 국적법을 개정해야 한다.
17. 주부의 가사노동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18. 여성의 국민연금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연금분할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
19.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아동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부모보육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 중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21.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22. 노인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6] 성차별적인 제도 및 의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3. 미디어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4. 영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입시위주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 공교육과 사교육 제도의 일원화
25.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여성학과 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26.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27. 여성 대상의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고 여성에게 정보의 보편적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

7]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28. 환경오염의 최대 피해자인 여성들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확산하고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높여나간다.

8]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

29. 방위비 삭감, 남북여성교류 지원, 통일정책수립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
30.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범죄를 근절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여성정책 8개 분야 30대 과제 해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담당기구로써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1. 여성정책 전담부서로서의 여성부를 신설해야 한다.

○ 현황

- ▶ 정무장관(제2)실은 그 기능상 각 부처간의 여성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정무기능에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여성권익을 위한 법제정권과 예산 및 인력 면에서의 집행력을 갖고 있지 못하여 기능강화와 관련한 문제가 누차에 걸쳐 지적되어 왔다.

○ 정책과제

-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 제도 및 행정조치, 관행 등에 의해 여성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사·연구와 여성관련 통계 제공, 입법제안권, 여성정책 관련 발안권, 여성정책 예산 기획 및 집행권, 적극적 조치의 이행 감시, 여성관련법 이행감시 등의 기능을 갖춘 여성부가 필요하다.
- ▶ 여성부는 여성이 일정 수준의 평등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운영하며, 충분한 권한과 인력, 재원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관련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된 여성관련 장관회의(대통령이 주관)를 설치해서 부처간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각 부처에서 남녀평등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성정책 협조부서로 지정된 40개 관련 부처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담당관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여성국 또는 여성과를 설치해 중앙부처의 사업을 연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각 분야의 여성통계를 개발하고 여성의 현실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배포해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금의 적립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 현황

- ▶ 정무장관(제 2실)의 97년 예산은 191억 8천8백만원(96년 80억 3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 67조 5천7백8십6억원 중 0.0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여성개발원 출연금이 58억 4천만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이 100억으로 정무장관(제 2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불과 33억 4천8백 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분야별 예산 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이 26억 9천 7백 만원으로 차지하고 있고 여성정책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에 불과하다.

○ 정책과제

- ▶ 여성발전기금을 2000년까지 1000억 조성해야 한다.
- ▶ 가족복지 서비스(노인, 아동)를 사회화하기 위한 비용, 모성보호비용,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이 획기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2]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3. 정당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현황

- ▶ 여성국회의원이 299명 국회의원 중 9명을(3%) 차지해 세계를 107등까지 등급화했을 때 94위(97년 IPU 조사)로 최하위다. 2기 지방의회는 1기의 0.9%보다 조금 진전되어 광역의회에 여성의원 5.7%, 기초의원 여성의원 1.6%로 표현되는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여성의 교육수준에 전혀 상응하지 못하는 불균형 수준으로 매우 미약하다.
- ▶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을 여성의 평등한 대표성을 실현하는 평등참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이고, 사회 각 구성원의 집단들의 대표성과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여성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던 정치영역에서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촉진하고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 정책과제

- ▶ 각급 선거에서 여성을 30% 비율로 공천해야 한다.
- ▶ 각급 선거의 비례대표에서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공천해야 한다. : 국회 30%, 광역의회 50%
- ▶ 당고위직 임명시 30%이상 여성을 임명해야 한다.
- ▶ 선거공영제 확대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4. 고위임명직 공무원의 여성임명을 확대해야 한다.

○ 현황

- ▶ 현정부는 출범시 고위정책결정직에 과감한 여성기용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24명의 장관중 3명(12.5%)을 여성으로 임명한 것은 그 정책의 실현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수는 매년 줄어 97년 현재는 정무제2장관만이 여성이다.

○ 정책과제

- ▶ 국무위원 중 30% 여성할당을 실시해야 한다.
- ▶ 광역자치단체장 부단체장 임명시 정무직 1인을 여성에게 할애해야 한다.

5. 2000년까지 정부 각종위원회에 30% 여성할당을 제도화해야 한다.

○ 현황

- ▶ 현 정부는 96년 7월 발효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년도별 최소목표율>을 설정해 2005년까지 30%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97년에는 12%의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7.2%에 그치고 있다.

○ 정책과제

- ▶ 주요 위원회에 2000년까지 여성을 3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 ▶ 매년 참여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보고를 실시해서 여성참여가 부진한 위원회를 집중 관리하도록 한다.
- ▶ 여성정책관련 주요위원회(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성차별개선위원회 등)에 여성이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
- ▶ 성인지적 관점이 시급히 필요한 방송위원회 및 각종 신설위원회에는 30% 여성할당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여성의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기반을 조성한다.

6. 채용·배치·승진·직업훈련에서 일정비율 이상 여성할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황

- ▶ 95년 현재 전문대 졸 이상의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 ▶ 고학력 인력양성에서의 계열별·성별분리현상이 심각하다. 남학생은 공학계와 사회계, 여학생은 인문계, 예체능계, 사범계에 집중되어 있다.
- ▶ 97년 현재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여성졸업생은 9.4%, 97년 기능대학 입학 인원 중 여성비율은 17.4%, 직업전문학교 학생입학 인원 중 여성비율은 8.1%로 모든 훈련기관에서 여성입학문호를 개방하고 여성에 적합한 훈련직종 설치 및 여성전용 훈련시설의 설치(현재 안성여자기능대학) 등 여성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문호를 개방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직업훈련이 남성기능사 양성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 ▶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제 시행이후 고용정보전산망을 구축하였고 지방노동사무소 46개소, 인력은행 3개소,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 6개소 등 171개소가 설치되어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취업알선을 받은 여성의 78.9%가 사설기관을 통해 알선받았고, 공공직업소개 기능의 부실로 민간직업소개소가 유료불법영업을 하면서 유혹업소 중심의 알선행위로 여성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대안이 대단히 부실하다.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원해도 취업정보의 기회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 또한 심각하다. 따

라서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알선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 ▶ 정책은 관료주의의 행정적 메카니즘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여성공무원이 각 분야에서 각 업무의 담당자로서 일하는 것은 여성의 특별한 경험과 관심 그리고 이해를 정책입안에 반영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상급직에의 여성참여 확대와 성별 직종분리현상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개발, 실시해야 한다
- ▶ 공무원채용목표제는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과제로 채택되면서 관련공무원법령이 개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고있다. 1996년 실적을 보면 외무고시 41명중 여성4명합격(추가합격자 1명 포함), 행정고시 192명중 19명합격(추가합격자 2명포함), 7급 행정·공안·외무행정직 285명중 25명합격(15명 추가합격)되어서 동조치의 혜택을 받은 여성은 모두 18명이었다.

○ 정책과제

- ▶ 공공직업훈련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모집시 여학생 30%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 ▶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 30% 고용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 ▶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취업센타를 설립해야 한다.
- ▶ 5급, 7급 공무원 채용시 2000년까지 30% 여성할당을 실시해야 한다.
- ▶ 공무원 상위직 특채시 일정비율로 여성할당을 실시해야 한다.
- ▶ 5급 이상 승진시 여성공무원 20% 할당을 실시해야 한다.
- ▶ 학교행정직 및 교육전문직 승진시 20% 여성할당을 실시해야 한다.
- ▶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주무부처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7. 남녀노동자의 직장생활과 가사생활의 양립지원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현황

-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유아휴직 사용을 남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근로자'라고 육아휴직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의 육아휴직제도 설치율은 41.8%이나 활용하는 경우는 17.1%에 불과하다.
- ▶ 1995년 고용보험법이 실시되면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97년 현재

대기업에는 12만원, 중소기업에는 13만5천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기혼여성의 고용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하지만 육아휴직기간의 임금보존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커다란 한계가 있다.

- ▶ 정부는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을 통해 95년에서 97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융자하여 보육시설을 7,590개소로 증설하여 보육률을 60%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직장보육시설 부분을 보면 공공직장보육시설 240개소(국가기관 3개소, 지방자치단체 157개소, 정부출연기관 80개소)를 설치하는데 시설은 기존 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하되 이경비는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용비는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육료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500개소, 중소기업에 700개소로 모두 1,200개소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는데, 재원조달방법은 시설비 등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며 나머지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6년에는 <직장보육시설 확충대책>을 발표하여 97년 중 총 239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주요공단 등지에 직장보육시설을 70개소를 설치하고 대기업 위주로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3%대의 저리로 설치비를 융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 가족간호휴직제도는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199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95년 11월 총무처에 따르면 가족간호휴가제도를 사용한 국가공무원은 21명(남자 7명, 여자 14명)에 불과하고 이 제도는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5.6%에 불과하다.

○ 정책과제

- ▶ 육아휴직의 유급화 :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
- ▶ 사용주의 육아지원 다양화 및 육아지원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 가족간호휴가제도 도입 :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족간호휴가제를 노동관련법에 명시하여 일반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8. 교묘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고용평등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현황

-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명시적인 차별은 점차 없어지는 추세인 반면,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은 점점 구조화되고 있다. 채용에서의 남녀 직군 분리, 비정규직 여성고용의 증가, 배치 승진에서의 교묘한 성차별, 교육훈련에서의 여성에 대한 기회 제한 등의 다종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다.
- ▶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에서부터 추행, 강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직장내 성폭력은 가해자 또한 상급 직위의 남성관리자, 동료뿐만 아니라 거래처, 고객등 다양하다. 직장내 성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해고, 퇴사토록 한다. 때문에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평등권 보장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 성차별문제를 전담해서 해결할 것이 기대되는 여성감독관의 수는 전체 근로감독관 중 10%도 안된다. 사업장내 평등법 준수를 촉진하고 차별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자세를 갖춘 감독관을 두어 행정감독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 정책과제

- ▶ 고용형태, 인사제도 등 결과적인 성차별을 초래하는 간접차별을 규제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한다.
- ▶ 직장내 성폭력 규제 및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 고용평등감독관제 실시 및 고용평등위원회 강화해야 한다.

9. 여성고용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현황

- ▶ 상용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90년 32%에서 94년 29%를 감소했고 전체 시간노동자 중 여성의 차지하는 비율은 93년 64.9%로 시간제노동의 여성화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 ▶ 경비, 청소, 하역업종 이외에는 파견업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45만-55만명으로 파견노동자가 추산되고 있다. 파견노동자의 40%가 물려

있는 사무직에서 여성과전노동자의 비율은 75%가 되고 업무영역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 ▶ 가내노동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하청업체가 급증하고 가내노동자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력의 주변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전산입력업무에서부터 교정, 교열, 편집, 그리고 기획에 이르기까지 가내노동으로 위탁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 정책과제

- ▶ 파견근로법 제정 반대 및 공공직업소개소 확대를 통한 노동력 수급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 ▶ ILO 시간제노동에 대한 협약 비준 : 명목시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 임신직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상용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 ▶ 국제노동기구(ILO)의 가내노동협약과 권고에 따른 가내노동정책 수립 및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 ▶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법, 4대보험까지 확대, 전면 적용해야 한다.

1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및 일하는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 현황

- ▶ 산전, 산후 건강관리는 보건소에 등록된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여성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 ▶ ILO에서는 산전산후휴가를 12주로 확대하고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사회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 출산시 의료비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만 본인부담금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 여성의 과로는 유산과 직결되며 임신부의 모성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근로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해야 한다.
- ▶ 노동강도 강화, 단순반복작업 증가, 많은 업무량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유해물질의 사용증가 등으로 유기용제 중독과 작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과로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저임금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해온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자는 정부와 기업의 논리는 기업규제완화조치의 방편으로 여성보호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 정책과제

- ▶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모든 여성의 분만시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
- ▶ 모든 가임여성의 산전후 각종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비용을 의료보험에서 급여화해야 한다.(초음파 검사 포함)
- ▶ 여성관련암(자궁암, 유방암 등) 진찰시 보험급여화해야 한다.
- ▶ 여성노동자 산전후 휴가 90일 확대 및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가내노동자의 출산수당을 의료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
- ▶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의 야간근로를 전면금지해야 한다.
- ▶ 유기용제 중독,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병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 ▶ 유급생리휴가 존속(40시간노동제가 정착되고 근로기준법이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1. 여성농민을 농업생산인력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 현황

- ▶ 농업생산기여도에 있어 여성농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95년 농가노동투하량의 48.2% 차지)하는 것에 비해 정부의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은 부재하다.
- ▶ 여성농민 노동의 평가절하로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만큼의 노동의 대가나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고 봉건성의 존재로 가정내에서 농가경제를 담당하면서도 경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 ▶ 여성농민의 생산물과 재산에 대한 소유권리가 주어지지 못하고 여성농민을 농업경영인으로 인정하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 여성농민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

○ 정책과제

- ▶ 여성농민을 생산경영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정책입안과 입법화를 추진해

야 한다.

- ▶ 농협이사에 여성농민 30% 할당을 실시해야 한다.
- ▶ 여성농민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종합복지센터 건립(또는 보건소 기능 강화)해야 한다.
- ▶ 농어민연금에 여성농민 독자적인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
- ▶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처 선정 및 담당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12.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현황

-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7%(1996년)로 스웨덴의 77.2%, 미국의 55.7%에 비해 현저히 낮다.

○ 정책과제

- ▶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적 지원과 보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여성창업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4]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상품화를 근절해야 한다.

13.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현황

- ▶ 정부는 93년 성폭력 예방 및 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 후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15개를 지원하고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1개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발생을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성폭력 경험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강간이 51%, 성추행이 49%, 이중 어린이 성폭력이 30%, 친족 성폭력이 18%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예방교육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성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 ▶ 93년 보건복지부 부녀상담소를 통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조사대상자(7,500명)의 61%가 남편으로부터 폭언을 포함한 학대를 당했으며 30.2%가 신체적인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9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신고된 122명 대상으로 조사한(유춘식) 내용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신체적 학대 55.4%, 방임 22.8%, 정서적 학대 7.6%, 아동유기 4.4%, 성적학대 2.2%로 나타났다. 1994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시 60세 이상의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노인범죄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노인의 유기, 학대에 관련한 문항에서 신체적인 폭행을 경험한 경우가 7.5%로 나타났다.

○ 정책과제

- ▶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및 시행령 제정
 -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에 대한 응급조치(사법경찰관 긴급출동, 가해자에 대한 임시적인 퇴거명령·접근금지명령)
 - 가정폭력피해자가 18세 이하의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가정폭력을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 부과
 -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예산 확보, 전문공무원 육성·배치,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피해자에 대한 피난처 제공과 위기개입 및 서비스 제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 지원)
 -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접근금지명령, 금전지급명령, 상담 및 수강명령, 손해배상명령, 사회보상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가격리처분, 친권행사 제한명령 및 친권행사자 지정명령)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보완 및 개정 : 성폭력의 개념을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정, 친고죄 전면 폐지, 1년까지로만 제한된 고소기간의 연장, 성희롱 조항 신설,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보장, 피해자의 신원과 비밀 누설 금지를 지켜야 할 대상에 언론기관 삽입하고 이를 어길시 벌칙부과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 ▶ 학교성교육의 정규과목화 및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

발해야 한다.

- ▶ 인권이 침해받기 쉬운 장애인 여성과 외국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유린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14. 성상품화 및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환경을 정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 현황

- ▶ 성의 상품화가 중 고등학생에게 무차별적으로 보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음란물과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성정보와 성행태는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있고 남성중심적이며 폭력적, 가학적, 쾌락적 형태가 대부분이다. 스포츠 신문 만화, 음란비디오, 음란만화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체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충동을 느끼거나 모방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1996년 1월부터 시행중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매매춘여성과 그 상대자인 남성 모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음성적인 매매춘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94년 정부는 전국적으로 윤락지역 수 56개, 매춘여성 5,213명으로 공식 집계하였으나 음성화된 매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 현재 유흥업소 중 향락업소의 수와 성적서비스 제공 가능자의 수를 추정해보면 전체 유흥접객업소 619,311개 중에서 향락화한 업소를 50.7%(91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유흥업소 중 향락화한 업소 비율)로 추정할 경우 313,991개로 볼 수 있고, 한 업소당 3.85명이 성적서비스 제공 가능 여자종업원으로 볼 때 1,208,865명이라는 통계가 나온다.

○ 정책과제

- ▶ 미디어의 성폭력 유발요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TV, 영화, 비디오, 상업광고 등 규제)
-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학교 주변의 불법 음란매체 등 추방
- ▶ 매매춘 방지, 인신매매 근절 및 향락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중간착취구조 단속)

15. 여성장애인과 외국인여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현황

- ▶ 정부는 여성장애인이나 외국인여성노동자에 대한 아무런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1995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분과'에서 여성장애인 1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과 취업 및 가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성폭행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육아의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외국인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폭력사건이 15건 발생했다.

○ 정책과제

- ▶ 여성장애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설, 가사·육아 등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가족복지 서비스의 사회화, 여성의 가사노동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한다.

16.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부계 혈통 중심의 가족법 및 국적법을 개정해야 한다.

○ 현황

- ▶ 남계 중심의 호주제도로 인해 인위적인 여아낙태가 증가하고 있다.
- ▶ 유엔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가족 성씨 선택의 자유나 남성중심적인 국적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공적으로 전개되거나 법률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정책과제

- ▶ 인위적인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 남아선호를 부추기는 호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 국적법을 부계중심에서 부모 중 선택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17. 주부의 가사노동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 현황

- ▶ 가사노동의 합리적인 산출을 통해 공적기준에 반영한다는 것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사회경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97년부터 상속세법이 개정되어 재산형성에 있어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속·증여세에 있어 배우자 공제를 30억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배우자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 ▶ 보험에 주부가사노동가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주부의 소득 인정기준인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시켰는데 그 내용은 월 613,912원에서 월 687,262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여성근로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 정책과제

- ▶ 가사노동 평가기준을 ①전 취업여성의 평균임금 ②연령, 학력별 평균임금 ③남편소득의 1/2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 ▶ 법정 여성근로연한을 65세로 확대해야 한다.

18. 여성의 국민연금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연금분할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

○ 현황

-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은 대략 27%에 불과(전업주부와 5인미만 사업장 여성 제외)해 국민연금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다.
- ▶ 여성은 남편을 통해 가급급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혼한 경우에는 이조차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 ▶ 여성의 노후는 남편이나 자식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이 절실하다.

○ 정책과제

- ▶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 1인 1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 ▶ 가입자의 연금소득을 부부공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이혼시 피부양 배우자에게 연금분할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
- ▶ 전업주부에 대하여 임의 가입이 용이하도록 현행보험료를 6%에서 3%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19.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아동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부모보육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현황

- ▶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을 변화시켜야 한다. 양적확충으로의 치중이 아니라 질적 고양을 꾀해야 한다. 아동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연결된다. 즉 보육교사의 자격 인정제도 강화,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 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강화, 전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부 인건비 보조를 위한 채용마련 등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개선이 필요하다.
- ▶ 이용자나 요구자들의 취업상황의 다양화와 보육사업에 대한 아동 복지사업으로서의 인식확대를 기초로 해서, 영아전담시설, 방과후 보육, 시간제 보육, 장애아 통합교육, 24시간보육등 보육유형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객관적 조사결과에 기초한 정책마련 및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 ▶ 아동지원체계를 현행대로 전액지원 대상과 반액지원 대상으로 이원화하는 체계가 아니라, 아동지원체계의 기준을 부모의 수입, 주거상황, 부채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 시켜야 한다.
- ▶ 보육비용의 현실화와 함께 보육비용 부모부담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으로 차등보육료제도를 도입 실시해야 하고 보육료 소득 공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정책과제

- ▶ 만 5세 아동의 경우 공교육화 관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다양한 보육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정책을 마련, 실시해야 한다.
- ▶ 국·공립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재정지원이 전체 보육시설로 확대되어야 하며 아동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및 기준의 세분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 시설운영상 요구되는 보육비용의 현실화와 부모 보육료 부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제도, 인건비지원등 종사자의 복지,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 학교,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을 개방해서 방과후 보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 ▶ 양질의 방과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교사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20. 중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 현황

- ▶ 95년 현재 초등학교 학교급식 추진현황을 보면 급식아동이 1,967,425명으로 전체 3,904,979명 중 5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학교 수로 보면 전체 5,772개교 중 4,140개교 71.7%가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97년까지 전면실시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약속이행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 ▶ 주부의 가사노동 경감과 관련해 고등학교 입시생의 도시락 걱정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 정책과제

- ▶ 초등학교 급식을 완전히 실시해야 한다.
- ▶ 중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우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해야 한다.

21.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 현황

- ▶ 95년말 현재 8,107세대 15,118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다. 이들에게는 가구당 10만원의 보조와 민간단체의 후원금이 있으나 생계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인 상태이다.
- ▶ 저소득모자가정(96년 현재 3인가족 월수입이 81만 9천원 미만인 세대)의 경우 자녀의 학자금 지원이 인문고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부자가정은 모자가정보다 월수입이 20만원 많아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차별을 두고 있다. 생업자금유자의 경우 모자가정이 부자가정에 비해 10배 이상 많아도 혜택은 2배밖에 되지 않아 부자가정이 더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 미혼모의 자녀들이 국내로 입양되지 않고 해외로 입양되고 있어 고아수출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혼후 자녀양육을 부모중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시설에 맡겨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 정책과제

- ▶ 편부모 가정의 경제적 지원 현실화 및 평등화,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
- ▶ 이혼 등 가족 변동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가출 청소년소녀를 위한 전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무료직업훈련원,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
- ▶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액수를 현실화하고 모자보호시설 입소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22. 노인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 현황

- ▶ 1996년 현재 여성노인인구의 비율은 63%이고 치매노인의 3/4가 여성노인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특히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성노인보다 평균 7-8세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와 사

회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과 달리 경제력의 부재로 인해 가족내에서 고독과 소외감이 심하며, 남성노인보다 우울증이나 폐경, 신경증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다.

○ 정책과제

- ▶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보장을 위해 생계보호비를 늘이는 한편 무각출 기초연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 ▶ 치매치료센터 등 여성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의 의료서비스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 ▶ 여성노인의 특성이 고려된 독자적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⑥ 성차별적인 제도 및 의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3. 미디어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현황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정성 원칙과 인권의 존중이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송심의 결과를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대로 심의,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 ▶ 방송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여성이 소수 참여하여 낮은 대표성을 보이고 있다.

○ 정책과제

- ▶ 매체 프로그램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심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 여성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미디어종사자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대중매체조직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지침서를 도입해야 한다.
- ▶ 대중매체의 채용시 30% 여성할당과 의사결정직 승진시 20% 여성할당을 실시해야 한다.

24. 영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입시위주 교육제도 개혁 : 공교육과 사교육 제도의 일원화

○ 현황

- ▶ 입시 위주 교육제도의 희생자는 청소년과 함께 자녀들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여성들이다.
- ▶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서 6대도시 주부들을 상대로 실시한 사교육 설문조사에서 85.8%가 과외를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4천원으로 조사됐다.

○ 정책과제

- ▶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공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25.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여성학과 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 현황

- ▶ 1995년부터 시행된 92년의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집필상 유의점에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덕 교과서에는 여전히 가정내에서의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부담이 제시되어 있고(아버지는 화초에 물을 주고 있고 어머니는 식사준비를 하는 등) 교사들간의 역할도 성별에 따른 예화들로(남자교사는 가르치고 여자교사는 상처에 약을 발라준다)나타나 있다.
- ▶ 93년부터 남녀평등의식 제고에 대한 연수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데 각종교원연수시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성차별의식개선에 대한 내용을 연수과정의 성격과 연수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연수기관장이 교육과정 편성시 교양과목에 반영하도록 교육연수지침을 시달 (95.10.11)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양성평등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제공되고 있다.
- ▶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성상품화, 음란매체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면서 왜곡

된 성의식과 성행동이 만연해 있다.

- ▶ 여중생의 출산사건, 초등학생 강간 등의 문제를 통해 드러났듯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책임있는 성행동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

○ 정책과제

- ▶ 성교육과 여성학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7차 교육과정부터) 성교육 전담교사를 양성 및 정기적인 성교육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교직과목 이수과정에서 성교육과 여성학을 필수과목화해서 교사 양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 양성평등한 교과서를 제작하고 양성평등 교육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 ▶ 청소년 관점에 입각한 성교육 시청각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26.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 현황

- ▶ 정부가 발표한 제 2차 교육개혁방안(95.5)에 의하면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여 여성 및 노인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사회교육법을 개정하여 사회교육단체 및 기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 ▶ 여성회관, 문화센터나 구청, 대학의 사회교육원 등에 의해 여성사회교육의 장이 확대되었으나 교육비용은 여전히 개인부담이다. 또한 교육기회가 도시 집중적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여성, 여성노인들에게는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 ▶ 양성평등적인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 정책과제

- ▶ 저소득층과 농어촌 여성들에 대한 여성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 교육재정 마련 및 여성사회교육단체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27. 여성 대상의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고 여성에게 정보의 보편적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

○ 현황

- ▶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성들 자신은 정보에 대한 접근과 소유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보가 자산이고 자본이 되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불평등한 분배는 사회적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에 된다. 보다 평등한 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의 처리능력, 정보의 배분에 있어 불평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책과제

- ▶ 여성 대상의 정보교육을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여성관련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

⑦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28. 환경오염의 최대 피해자인 여성들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확산하고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높여나간다.

○ 현황

-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생물학적인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가 일차적인 피해자이다. 핵발전소에 근무하던 노동자 부인이 뇌암을 앓았던 사건,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가 골프장 잔디에 뿌리는 농약에 중독되어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계속 유산을 했던 사건, 낙동강 폐놀 유출사고시 임신부들의 사산 및 유산 사건, 작업장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불임 및 생리중단 사건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여성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요즘은

소각장 주변의 동물들이 불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대기오염과 소음으로 인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 피해도 위험한 수준이다.

○ 정책과제

- ▶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실시하여 가능한 오염원을 줄이고 동시에 환경파괴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 친환경적인 생산과정과 소비양식이 정착되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⑧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

29. 방위비 삭감, 남북여성교류 지원 및 통일정책 수립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 현황

- ▶ 현재의 우리나라의 방위비 수준은 전체 예산지출규모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고 지나치다. 1997년 전체예산은 67조 5천7백8십6억원이고 그 중 방위비는 14조 3천5백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6.2%이다. 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8% 증가한 75조 5천6백억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이중 방위비는 6.2% 증가하여 15조 2천4백억원이 되었다.
- ▶ 50년 이상의 분단으로 인해 서로 이질적인 가치관과 여성의식을 지닌 여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를 알고 화해와 협력을 해나가는 중간과정과 단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여성간의 대화나 다양한 만남은 상당히 중요하다
- ▶ 통일은 국정지표의 하나이며, 국제적인 여성의제인 평화의 주제와 관련된 분야로서 통일분야 여성정책을 통일추진과정 및 통일이후

상황에서 여성의 참여와 기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통일원등 관련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정책을 1997년 6월 정무장관(제2)실은 표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통일과 여성관련사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당히 빈약하다. 현재 통일,군사,안보분야에서 대통령 산하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여성의 비율이 14%이고 국방부의 군비통제실, 통일원 관련부처 등 평화통일관련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 ▶ 경쟁과 대립, 갈등과 분열이 아닌 관용과 화해의 평화적 가치관이 사회에 보편화되도록 확산시켜나가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통일 전후과정의 필수적 항목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언제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로 닥쳐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대비 전문요원 양성, 통일대비 교육지원법(남북화해와 통일대비를 위한 교육지원법)을 제정했다. 또 최근 민간단체가 통일평화교육을 주도하고 통일원이 이를 지원하는 정책도 표명한 바 있다.

○ 정책과제

- ▶ 방위비 삭감과 여성복지확대 :

21세기 남녀가 평등한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남북한은 자주국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비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복지비와 여성복지비를 대폭 확대하여 남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도록 해야 한다.

- ▶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보장과 지원 :

다양한 남북여성교류를 통해 남북 서로의 여성 상황과 여성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통일 이후 여성정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여성교류를 위해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 통일관련 분야의 정책수립과 결정집행과정에 여성 참여 30%이상 확보

여성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평화, 안보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가 2,000년까지 30%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평화교육을 위한 여성지도력 양성과 지원
 - 통일평화교육 실시과정에서 민간단체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도록 보장함과 아울러 반드시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정부는 학교와 언론에서 평화교육과 평화문화를 다루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 여성단체들이 평화 가치관 형성과 평화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여성 평화운동지도력을 배출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30.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범죄를 근절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현황

- ▶ 주한미군에 의한 성범죄는 약소국 여성의 문제일뿐 아니라 국가주권의 문제이다. 1992년 10월부터 1993년 8월까지 총 850건의 미군범죄중 단 10건인 1.17%에 대해서만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한미행정협정 때문이다.
- ▶ 지난 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은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전쟁범죄이며, 그 책임자는 색출 및 처벌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96년 4월 제 52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UN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도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로서 일본정부는 법적 배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범죄와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조성하여 민간모금차원에서 이를 해결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 정책과제

- ▶ 한미행정협정의 개정과 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방지

정부는 중단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상을 속히 재개하고 불공평한 법의 개정을 통해 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의 유린을 방지하고 국가주권의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외교정책 실시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범죄인정과 법적 배상을 실시하도록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여러 형태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해야 한다.